

					G-B-9
제목	국문	금연구역, 흡연실 선포와 흡연구역설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전국 국가기관(관청)을 중심으로-			
	영문	The study of the restrictive smoking area on perceived need of smoking area			
저자 및 소속	국문	김태욱 ¹ , 허남욱 ¹ , 오희철 ² , 지선하 ³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³			
	영문	Tae-Wook Kim ¹ , Nam-Wook Hur ¹ , Hee-Choul Ohrr ² , Sun-Ha Jee ³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² ,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³			
분야	역학 [기타]	발표자	김태욱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흡연구역의 지정 여부 제정을 시발점으로 청와대의 금연구역 설정과 자발적인 금연캠페인 촉진등을 통해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발현되었다.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과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흡연감소 전략 중 흡연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이에 전국 국가기관(관청)에서의 금연프로그램 및 흡연을 파악여부현황을 파악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여부와 청내 총무책임자의 흡연 규제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p> <p>2. 방법</p> <p>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관청이며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 지역의 21개 구청을 제외한 총 248개 관청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는 전국 관청의 총무책임자(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기획 정책 실장 등) 1인이 해당 관청을 대표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1달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시작 15일 후부터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설문협조요청을 하였다. 회수된 159개 설문지 중 출처가 불분명한 것과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것등을 제외한 154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p> <p>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기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 필요성, 흡연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여부와 흡연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est 를 실시하였다.</p> <p>3. 결과</p> <p>설문조사 결과 63%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관청 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각각 91%, 59%로 나타났으며 흡연실 설치여부와 흡연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분석 결과 흡연실 설치를 한 관청에서 흡연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분석에 사용된 154개 관청 중 22%에 해당하는 34개 관청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금연프로그램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광역시청·시청·도청·군청·구청 별 분석 결과 이러한 분류에 따라 금연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청에서의 높은 실시율이나 군청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 필요성을 시사하였다.</p>					

현재 관청에서 해당 청 공무원들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해 흡연률, 금연시도율, 금연성공율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각각에 대하여 미 파악율이 86.4%, 89.65, 90.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흡연실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청의 경우 파악한 흡연실태의 평균은 흡연율 45.8%, 금연시도율 35.3%, 금연성공율 11%였다.

설문지 회수 관청 중 78%에 해당하는 금연프로그램 비실시 관청의 경우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주변 여건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금연이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금연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4. 고찰

흡연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이며 흡연자에 대한 관심과 처치가 공중보건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예방 가능하기에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켜 세계적으로 다양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흡연감소 전략중 흡연규제와 관련하여 Brenner, Fleischle(1994)등은 흡연자들의 금연과 흡연을 감소를 위해서는 작업장에서의 흡연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고 Brenner 등은 1997 년의 연구를 통해 금연작업장과 흡연 가능한 작업장에 상관없이 흡연자의 95%이상 작업장에서의 흡연규제에 동의하였다고 제시하였다. Ashley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작업장에서의 흡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작업장의 흡연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80.3%가 찬성하였으며, 흡연자들은 작업장내 흡연에 관한 규칙 제정시 이것을 잘 지키겠다는 응답이 56.7%로 나타났다. 그의 공공장소별 금연구역 설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무실(73.0%), 화장실(75%), 로비(74.7%), 식당 (75.2%)등 이들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설정에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렇게 담배에 대한 흡연규제는 효과면에서 탁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흡연자들의 흡연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그 효과성이 미흡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흡연자 개개인에게 금연프로그램을 통한 흡연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흡연을 감소를 위한 전략면에서 중요하고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미 청내에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태 흡연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어 흡연규제 정책이 보다 중요한 흡연감소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복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기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에 대한 강력한 금연 정책 및 국가 기관 스스로의 금연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